The background features a grey grid with traditional Korean decorative motif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bands of repeating pattern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geometric designs. At the top, there are larger, more complex motifs, including a circular design with a central flower-like shape and a square design with a central circle and radiating lines. The overall aesthetic is traditional and elegant.

동아시아 시각의 베트남 근현대 역사

동아시아 시각의 베트남 근현대 역사

노영순 (한국해양대학교)

1. 프랑스의 식민통치와 베트남의 초기응전

1850년 이후 베트남에 진격한 프랑스는 1802년 개창 이래 유가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 특히 기독교를 발원색출하기도 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정권인 응우옌 왕조(Nhà Nguyễn, 阮朝)와 맞서야 했다. 응우옌 왕조는 유연성 부족으로 프랑스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1858년에서 1885년 사이 마지못해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고 무력하게 저항을 해보는 등 양극단 사이를 불안정하게 오갔다. 후에(Huế)에 있는 조정인 어린 황제 함 응이(Ham Nghi)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식민침략에 전면 저항하라는 근왕령을 내렸던 시점에는 이미 프랑스가 청불전쟁의 승리 등을 비롯해 베트남에 확실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버드 교수 호 타이(Hồ Tài Huệ Tâm)가 『급진주의와 베트남혁명의 기원』에서 지적했듯이 1885년 당시 엘리트 세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프랑스에 철저히 저항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보호체제에 협력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였다. 근왕운동(Phong trào Cần Vương, 勤王運動)이 전개되었던 1885년부터 1896년 사이 왕조 자체는 더욱 급속도로 프랑스의 통제 하에 놓였다. 때문에 계속 ‘반란’을 진행했던 이들은 이미 응우옌의 왕과 왕조보다는 베트남 민족의 이름으로 저항을 했으며, 희망이 없는 투쟁에 몸을 맡기고 있었지만 애국이라는 고지를 점령할 수는 있었다.

좀 더 치밀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어젠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판 보이 찌우(Phan Bội Châu, 1867-1940)와 판 주 쩐(Phan Chu Trinh, 1871-1926)으로 대표되는 다음 엘리트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새로운 전망의 요점은 첫째, 서구로부터 배운다는 전략이었다. 그 목적은 물론 식민정권에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트남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일정한 혁명적 변화 이후에야 비로소 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서구의 식민 세력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두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과 실용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이었다. 판 주 쩐이 첫째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판 보이 찌우는 두 번째 전략에 힘을 다했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을 위한 혁명’의 전투장은 교육이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하나의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1885년에서 1945년까지 프랑스의

지배는 응우옌 왕조와의 보호조약에 기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가 최종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응우옌 왕조는 북부 베트남(통킹, Tonkin, Đông Kinh, 東京; Bắc Kỳ)과 중부 베트남(안남, An Nam; Trung Kỳ)을 명목상으로는 계속 통치하는 형세였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전통 봉건왕조와 프랑스 식민정부라는 두 실체와 마주해야 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인 응우옌 왕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그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도전하기 위해 프랑스 공화국의 자유라는 가치에 호소하기도 했다.

2. 민족주의, 반식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는 제국주의 주요 강대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들 유럽 제국이 약화되는 과정은 아마도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20세기 벽두부터 시작된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의 외관은 본질적으로 이분화된 사회의 -축적된 경제적 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부르주아) 그리고 노동력 밖에는 소유한 것이 없어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를 파는 '재산 없는 대중'(프롤레타리아트)- 내부 실체를 가리고 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미는 힘은 사적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과학, 산업, 기술 변화로 인한 발전과 진보는 이 목적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경제가 더욱 복잡하고 진전될수록 이들 두 계급 간의 차이도 심화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증가시키려면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임금(생활수준)을 희생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급기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칼 마르크스는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고-파괴하지 말고, 그 생산력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동력화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V. L. Lenin, 1870-1924)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현상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처, 값싼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처를 제공하여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제국주의는 또한 식민지로의 이민이나 고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럽의 노동자 계급 사이에 인종의 우수성을 심어주고, 제국주의 경쟁에서 민족주의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계급적 반감을 무디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경쟁에 내포되어 있는 인종 간 대립과 국가 간 반목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대립인 계급 대립을 드러낼 것이다.

레닌의 분석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주요 유럽 강대국의 이러한 제국 경쟁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을 혁명적인 계급투쟁으로 전환하여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로 하는 대신에 유럽의 사회당들과 소위 '제2인터내셔널'은 각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전쟁 논리에 동조하고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오직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나중에 공산당)만이 레닌의 지도하에서 혁명적인 투쟁 시기를

거쳐 1917년 정권을 잡았으며 사회주의 국가(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창설을 선포했다.

레닌과 러시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1917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를 놓은 해이기도 했다. 본질적인 차이는 이제 더 이상 국가나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식민체제와 세계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 구체적으로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식민 지역 내 부역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으로 표상되는 - 간에 있었다. 1918년 독일 패배 후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신의 제국에서는 부인했다는 사실은 레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유 민주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1919년 러시아 지도자들은 세계의 공산당과 혁명 조직체를 연결시키기 위해 ‘제3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을 조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세계 이론에 조직적인 실체를 부여했다. 레닌의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와 반-식민주의 투쟁을 연계하려고 고안된 코민테른의 주된 문건이다.

그러나 이 세계전략이 직면한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식민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산업 사회였다. 주요 계급 대립이 자본가와 무산자 사이가 아니라 지주와 농민 간에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표방한 저항운동이 구체제 복원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었다. 구체제는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한 식민정권보다 더 ‘반동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주된 목표는 식민세계에서 작지만 혁명적인 ‘핵’을 - 지식인, 대도시에서 막 생성되고 있었던 노동자, 그리고 빈한한 농민으로 구성되는 -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연후 이 혁명적인 핵은 ‘진보적인’ 민족주의 엘리트와 -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 ‘부르조아-민주주의자’- 연합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연합은 세계적인 혁명세력과 반식민주의 세력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식민 제국의 통치를 일소한 후에야 진정한 투쟁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고로 식민지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연합은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었다. 베트남 공산주의의 아버지 호 쩌 민(응우옌 아이 꾸옥 Nguyễn Ái Quốc 이라는 다른 가명으로 알려진)의 정치 사고에 이 이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가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1919년 이후 시기에 다른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3.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급진화와 인도차이나공산당

1920년대 초 소련에 총본부를 두둔 코민테른은 세계 혁명 운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와 식민화된 모든 세계에 관한 코민테른의 지도 전략은 혁명 세력과 엘리트 민족주의 세력인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모델은 지방 군벌을 제거하고, 중국의 일부 영토와 경계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

적으로, 1924년 광둥(廣東)에서 결성된 중국공산당(1921년 조직)과 중국국민당 간에 맺어진 국공합작이었다. 이 연합의 기초 위에서 코민테른은 남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걸친 광범위한 혁명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자리하고 있는 조직체 중에는 1920년에 결성된 인도네시아공산당, 1925년 호찌민이 광둥에서 결성한 베트남혁명청년동지회(Việt Nam Thanh Niên Cách Mệnh Đồng Chí Hội), 그리고 주로 중국인의 도시 조직체로 1930년에 출발한 말레이공산당(MCP)이 있었다.

코민테른은 원래 식민지의 혁명운동을 식민 '본국' 공산당의 후견 하에서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의 혁명 운동을 '지도'해야 했다. 그러나 논리상의 모순이 이러한 연계를 방해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하게는 동남아시아 혁명가, 특히 호찌민은 혐오해 마지않는 식민 관계를 혁명적인 용어로 다시 재생산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시기에 유럽인이 지도하는 세계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코민테른 네트워크는 동남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감과 운동에 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순한 선전 문구로 번역되어 대중을 동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농민과 전통적인 농촌 오지민들의 '세계관'을 그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공산당은 1920년대 초기에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정 지역에서 대중 동원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시아 공산주의에 가장 커다란 상처를 준 사건은 1927년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깨어진 결과 나타난 중국 민족주의자들과 중국 공산주의자 간의 내전이였다. 코민테른은 공산당과 '부르조아-민주주의' 민족주의 정당 간에 연합을 격려하던 정책을 철회했다. 차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공산주의 정당은 민족주의 활동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도록 강요되었다. 베트남혁명청년동지회가 1927년 붕괴된 이후 1930년 호찌민의 지도로 성립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창당 프로그램에 있는 '계급투쟁'은 실제로 프랑스에 대한 '애국적인 투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개월 후에 가서 이 두 경향은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요소가 되어갔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30년 창당되자마자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소요 사태에 개입되었다. 이 소요는 세계공황이 이 지역에 가져온 재난으로 가속화되었다. 1929년과 1931년 사이 베트남 대부분에서는 파업, 시위, 프랑스인과 베트남인 정부 관리를 겨냥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이 그렇지 않았다면 무질서한 지역적인 반란들이 되어 버렸을 일련의 반불운동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조직화했다. 중부 베트남의 예안(Nghệ An)과 하띤(Hà Tĩnh)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로 '소비에트'망이 건설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이들 반불투쟁과 소비에트를 분쇄함으로써 건설 초기에 있던 당은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살아남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30-31년 반란의 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민족 통일보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면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각성이었다. 베트남 사회 내에서 프랑스에 대한 애국적인 통일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의 관계는 이후 호찌민이 풀어야 할 전략적인 숙제였다.

프랑스 당국은 식민지 코친차이나(베트남 남부, Cochinchina, Nam Kỳ)를 ‘갈색의 프랑스인’이 사는 ‘해외’프랑스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소위 ‘동화’정책이라는 것을 추구했다. 여타의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당국은 보호행정이라는 틀에서 대체로 토착의 정부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식민행정과 보호행정 두 정체 모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치 발전의 여지도 허락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의 활동과 자치정부나 독립 요구는 프랑스 식민 행정부는 물론 응우옌 왕조에게도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에 입헌당은 코친차이나의 정부 조직에 베트남인 대표를 늘리고 출판의 자유와 프랑스 시민권 확대 요구 등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요구에서조차 입헌당이 프랑스로부터 개혁을 ‘끌어내지’ 못하자 이 온건 당은 지지 기반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양 차 세계대전 사이 아주 한정된 프랑스의 자유화 조치가 잠시 취해지기도 했지만 늘 탄압 시기를 동반했다. 프랑스가 잠시라도 탄압의 끈을 늦출라치면 축적되어온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열망이 분출되어 나왔으며 프랑스는 급히 다시 끈을 조여야 했다. 심지어는 젊은 황제 바오 다이(Báo Đại, 保大)가 베트남 왕조 정부를 이용하여 아주 온건한 개혁을 하려 했던 시도도 바로 좌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시점에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는 외견상 견고해 보였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 베트남인의 에너지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의 종교 집단으로 향했는지 모른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26년에 형성되고 사이공, 특히 사이공 북서부 근교에 상당한 신자를 가지고 있었던 까오 다이교(Đạo Cao Đài, 道高臺)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남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급진적인 불교 종파인 호아 하오교(Đạo Hòa Hảo, 道和好)였다. 이 종교 집단들은 강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1945년과 1946년 같은 무정부상태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3년 인도차이나에 진주한 일본은 1945년 3월 연합국이 인도차이나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그럴 가능성은 농후해 보였다) 프랑스 식민정권은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 식민정권을 제거했다. 명목상으로 정치적 권위는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군주에게로 넘겨졌다. 그러나 특히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다가 안 그래도 가난한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는 기근까지 겹쳐 점점 더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바로 프랑스의 탄압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은 하나도 없었다. 후인 킴 카인(Huỳnh Kim Khánh)의 논문 「베트남 8월 혁명에 대한 재해석」이 보여주듯이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창설한 베트남(Việt Minh, 베트남독립동맹회)은 베트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적인 공백을 채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부의 일부지역에서는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같은 종교 조직들이 지방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지위와 베트남 운동의 신용은 1941년 이래로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반프랑스적(‘반 식민주의’) 그리고 반일본적(‘반파시즘’) 입장을 고수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4. 베트남의 독립정착 과정과 냉전

인도차이나에서 일본 군대와 프랑스 행정부의 불편한 공존은 1945년 3월 일본이 프랑스 식민정부를 제거하고 프랑스인들을 구속시킴으로서 종결되었다. 이후 일본은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독립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이전에도 프랑스 보호체제 내에서 군림했던 군주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នរោត្តម សីហនុ), 라오스의 시사방 봉(Sisavangvong, ສີສະວາງວິມົງ)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가 발생했으며 베트남에서 이 공백은 점차 베트남이 채우고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베트남은 즉시 권력을 장악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의 독립을 선언했다. 몇 주 있다 동남아시아사령부가 남부 인도차이나로 들어오고 중국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감독하고자 북쪽을 점령했을 당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남부에서는 그 위치가 다소 약했지만 북부와 중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정부로부터 1944년 권력을 이양 받은 드골 장군 하의 자유 프랑스 정부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의했다. 전반적인 식민 계획은 인도차이나 연방을 창설하고 이 연방 내에서 인도차이나의 개별 국가들은 프랑스가 임명한 고등주차관(High Commissioner)의 전반적인 지휘 하에 자치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한 한 이 계획은 1946년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실현되는 듯했다. 캄보디아의 군주, 시아누크와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라오스의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와 그들의 상징적인 수장인 시사방 봉은 1946년과 1954년 사이에 자치정부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국방, 경제, 외교정책, 그리고 문화적인 부문에서는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치엘리트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분열과 갈등이 있긴 했어도 1950년 중반에는 안정된 독립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라오스와 캄보디아 모두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이 두 나라는 냉전의 불모가 되어갔다.

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도가 없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남부에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사령부를 뒤이어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 발판으로부터 1945년 후반 동안 나머지 남부 도시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북부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지도자 호찌민은 일본 항복 후 연합국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북부를 점령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군대와 쉽지만 않았던 공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46년 초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입지가 약했던 프랑스는 북부와 중부 베트남의 지위를 놓

고 베트남과 협상해야 했다. 이들이 이룬 합의는 아주 모호했다. 즉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며 반면 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자율권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모두 자신의 일시적인 약점을 인정했다는 것의 다른 아닌 표현이었다. 1946년 3월에서 9월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두 당사자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의 기반도 없음이 드러났다.

1946년 12월 프랑스와 베트남 간에 무력충돌이 시작되었다. 1946년 동안 프랑스는 베트남과 협상하려고 노력했던 반면 동시에 특히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 산악 고지대(Central Highlands)와 남부에서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기면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입지를 무너뜨리고자 힘썼다. 1947년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권 내의 이념적인 분열을 이용해 베트남 운동이 명백히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공산주의 운동임을 널리 선전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프랑스가 식민통치기간 내내 온건한 민족주의 운동이 대중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장기간의 눈물겨운 협상 끝에야 프랑스는 1949년 베트남의 '적법한' 민족주의 정부인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 국가의 주역은 프랑스 보호령 하의 베트남 군주였으며 일본이 세운 베트남 '독립'정부의 명목상 수반이었던 다른 아닌 바오 다이였다. 프랑스의 분명한 목적은 반-식민주의 갈등을 공산주의자 베트남과 반공주의자 베트남의 내전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이 새로운 국가, 베트남국이 베트남에서의 프랑스의 입지를 확고히 지켜주지 못할 것임이 점차 분명해졌다. 바오 다이와 그의 정부는 프랑스를 위해 효율적인 군대도 믿을만한 정치적 지원도 해줄 수 없었다. 더욱이 1949년과 1950년 사이 프랑스-베트남전쟁의 성격이 소규모의 게릴라 투쟁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급히 충원된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 군대, 지방 시민군과 특별 군부대의 도움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이들을 믿고 전쟁을 감수할 만한 인력은 되기 못했다. 디엔 비엔 푸(Diên Biên Phủ, 奠邊府) 전투에서 프랑스가 극적인 패배를 맞이하기 이전인 1954년 초에도 상황 진전의 방향은 프랑스의 철수, 베트남민주공화국 하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로 향하고 있었다.

1950년대 초 베트남의 상황은 이 지역에 냉전이 침투하면서 급격한 영향을 받았다. 1945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련과 서구의 '반-파시스트' 연합이 깨어졌으며, 유럽은 소위 냉전을 맞이했다. 1949년 공산주의 세계와 서구간의 대결구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패배시키고 북경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아시아로 퍼졌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비공산주의 정권인 남한을 침입한 1950년에 냉전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서구에게, 그리고 특정하게는 미국에게 동아시아는 냉전의 전선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1950년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새로운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며, 공산주의 진영에 충실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프랑스를 지지하여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을 프랑스 식민통치기를 이은 적법한 정권으로 승인하고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조를 들어 분기 시작했다. 전쟁을 계속해야겠다는 프랑스의 의지

가 1953년과 1954년 사이 끊임없이 박약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베트남의 승리를 막아보려고 했다.

1954년 초에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교착상태는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타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1954년 봄 제네바에서 소집된 국제회의는 이러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때 까지 고조되어온 국제적인 긴장의 수위를 낮추려고 기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대국 대표자들이 1954년 5월 베트남의 상황을 토론하기 시작하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베트남의 당당한 입장은 베트남을 공산주의자가 장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리라는 미국의 결심과 부딪쳤다. 급기야 정전이 합의되었으며 베트남 북부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남부에는 비-공산주의자 정권이 지배하게 되어 베트남은 잠정적으로 분단되었다. 이들 잠정 정치 정권들 중의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베트남은 궁극적으로는 2년 후에 취해질 모호하게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일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왕국정부의 독립과 영토보전은 1954년 7월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5.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의 분단, 1945-54

1946년 12월에 발발해 1954년 7월까지 계속된 베트남민주공화국(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은 특히나 1940년대 말 냉전이 동남아시아에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프랑스가 식민전쟁을 두 베트남 정부 간의 내전으로 전화시켜려고 한 시도 때문에도 상당히 복잡한 양태로 전개되었다. 지나고 보니까 더욱 명백해진 이 갈등의 역사를 엮어 나간 하나의 요소는 제네바회의 이전 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이 펼쳤던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베트남은 정통 공산당인 인도차이나공산당(ICP)이 창설한 애국전선이었다. 1945년 9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지도하는 베트남이 베트남민주공화국이라는 독립 국가 안을 입안하고 현실화시켰다. 같은 달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의 항복을 감시하게 위해 베트남 북부로 들어왔을 때 친-중국국민당 성향을 가진 베트남 정치인들, 특히 1930년대 이래로 중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베트남국민당(Việt Nam Quốc Dân Đảng)과 동맹회(Đồng minh Hội)의 지도자들이 따라 들어왔다. 중국인들이 이들 정치인들을 권좌에 앉히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배제시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호찌민은 유연하고 기민하게 행동했다. 그는 베트남국민당과 동맹회 정치인들을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와 의회에 수용했으며 1945년 10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의 해산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순전히 명목적이었으며,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비밀리에 계속 지도했다. 중국국민당 군대가 1946년 봄 베트남 북부를 떠나자 친-중국 정치인들은 권좌에서 배제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숙청당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승리한 이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노동당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재등장했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정통 공산주의자 정권임을 선언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비교적 손쉽게 북부와 중부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반면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에서는 1945년 이래로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지방에 자리 잡았던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종교 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정치 세력들과 경쟁해야 했다. 1945년 8-9월 베트남은 이들 정치 단체들과 잠시 화해하기도 했으나 늦어도 1947년에 이르면 이들과의 결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후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는 점차 프랑스와 협력했다. 그리하여 코친차이나의 대부분은 1946-5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베트남의 통제 밖에 있게 되었다.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끌어낸 합의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강대국’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합의는 베트남과 프랑스인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프랑스 군대가 1956년 4월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56년 7월로 예정된 베트남 전국 총선거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게 되었다. 제네바 회의의 ‘최종선언’은 강대국의 입으로만 보장되었다. 더욱이 미국과 베트남국(남베트남)은 제네바협약에 말로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결국 제네바회의가 이룬 협약은 즉각적인 정전이었고 이 휴전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기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잠정적인 베트남의 분단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두 개의 다른 정권이 태어나도록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의 미래를 안정화시킬 아무런 의지도 조치도 없었던 셈이다. 1945년에서 1954년에 일어난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1954년 베트남이 서로 겨루는 두 개의 다른 국가와 정부로 분단 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도차이나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동적인 과정을 파악하게 해 준다.

제네바협정으로 서구, 특히 미국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반공산주의 ‘차단막’에 해당하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 방어 전략의 초석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를 마련한 집단안전보장조약이었다. 19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라는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국은 태평양에서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 그리고 앤저스(ANZUS, 오스트레일리아미국뉴질랜드 3국의 공동방위체) 조약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수많은 안보 조약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제 안보조약은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의 인적 우세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점 때문에 미군이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의 (1953-61) 의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어떤 곳을 공산주의자들이 침입하더라도 공산주의 세계의 심장을 향해 ‘대규모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었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는 1954년 말에 맺어진 상호방어조약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당시에는 동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인 지역을 포함), 필리핀, 태일랜드, 그리고 영국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조약의 중요성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면에 있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은 주로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립된 긴밀한 미국-타일랜드 우호관계, 둘째 제네바협정이 라오스를 냉전의 중립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반공산주의 ‘요새’를 건설하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베트남에 생존 가능한 반-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려는 노력이 들어갔다. 1950년의 시각에서 서양과 전세계 공산주의 간의 냉전에서 최전선이라고 간주되었던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 군사적인 원조와 조언, 전략

적인 경제 원조,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이전은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최전선’지역의 후방에는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던 필리핀과, 그리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긴밀한 후-식민 관계를 맺고 있던 말레이시아 지역이 중대한 ‘지원부대’의 역할을 했다. 미국이 이 안보망에 온갖 신경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이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윤곽을 드러낸 이 관계망은 애초부터 분명 미국과 이전의 식민 강대국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최근에 독립을 이룩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하게도 ‘신-식민주의’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시도에도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의 편에 서지 않겠으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블록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인 ‘비동맹’ 정책은 1950년대에 이들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대안으로 보였다. 이는 신생 독립 국가의 많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또한 ‘비동맹’ 국가는 세계무대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우누의 버마, 수카르노 하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시아누크 하의 캄보디아 모두 국제적인 사건에서 ‘비동맹’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비동맹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서구의 ‘신-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었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미국 그리고 캄보디아-미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계 주변에 우방 국가의 안전 블록을 건설하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공산주의의 전복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은 서양과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대치상황은 양자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핵시대에는 전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장에서 보다 세련된 경쟁이 추구되어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련과 미국 모두에게 대결의 공간은 공산 블록에 대한 철조망이 치진 주변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지화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소위 ‘제3세계’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신생 독립 민족국가가 식민 강대국 정권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건설하고, 가난과 후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거대한 사명은 종종 전쟁의 와중에서,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했으며 야심차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제·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국민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는 취약점을 가득 안은 채 살얼음판과 같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내부로부터 정치적인 격변의 손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다.

6. 베트남전쟁 1954-75: 미국의 개입과 패배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안전망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 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되었던 두 국가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1955년 바오 다이의 국가 수장직을 대신한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 吳廷炎) 수상(나중에 대통령이 됨)하에서 전도유망해 보였던 남베트남 정권이 1950년대 말에는 내부 약점이 심각하다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냉전 구도 하에서 미국은 이 정권을 한층 더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 Republic of Vietnam) 정권의 난관은 궁극적으로 프랑스가 공산주의 정권인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위적으로’ 창출해냈다는 바로 그 기원에 있었다. 이 국가가 본래부터 ‘국민의 신망(national credibility)’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지엠은 눈에 띄 정도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럴수록 국민의 신망은 더욱 낮아졌다. 1954년 이래로 미국과 지엠 정권은 ‘국가건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강제로 결행했다. 주안점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임시변통의 일종의 정치-군사연합(까오 다이 와 호아 하오 종교지도자를 포함하여) 세력을 제거하는 데 두어졌다. 이 연합지졸의 연합세력은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오 다이 국가의 주된 버팀목이었다. 이는 응오 딘 지엠 하에서 마을수준까지 직접 뻗어있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지방 정부 구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지엠 정부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 요원도,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지방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남베트남의 농촌 지역은 통치의 진공상태로 남겨졌다. 이러한 권력 공백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에는 남부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베트남의 저항망에 의해 급속히 채워졌으나, 제네바 회의가 남베트남을 바-공산주의 지역으로 지정하자 베트남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1956년 지엠이 농촌 지역에 숨어 있던 베트남 저항 요원들을 발본 색출하는 일에 집중하자 이 저항운동망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있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첫째 지엠과 미국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없음, 둘째 미국은 지엠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 셋째 남베트남에서 저항 운동이 지엠 정권에 대항한 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자, 1960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or South Vietnam, NLFVN, 일반적으로 ‘베트콩’ 또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조직)의 지도하에 남부정권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민족해방’ 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남베트남의 전복을 막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미국은 북부 정권이 남부 저항운동에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자마자 남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더욱 늘여 나갔다. 그러나 미국은 북부로부터 유입되는 요원과 물자로 무장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저항운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남부 정권에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증가하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특히 1963년 중반에서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엠 정권의 내부 정치 문제에 점차로 더 연루되게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지닌 문제는 프랑스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되었던 국가의 본질에 있다기보다 지엠과 그 가족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지엠 정권이 1963년 11월 미국의 묵인 하에서 군사 쿠데타로 축출당한 후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안정을 찾기는커녕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남베트남

이 위기에서 위기로 전전할 때마다 군사 원조와 개발 원조가 쏟아져 들어갔으나, 이 원조는 북베트남에서 호찌민 루트를 따라 남부로 내려오는 군인과 무기 때문에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1964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 행정부는 먼저 호찌민 루트를 그리고 나서는 북베트남에 있는 주요 군사표적을 직접 겨냥한 폭격을 계속 단행해 이들이 남부의 반도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다. 이 작전의 목적은 북부로 하여금 남부 반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케 하고 그럼으로써 남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 초가 되자 미국이 전투 부대를 직접 투입하지 않는 한 남베트남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1965년 약 150,000 미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단계적 확대’ 과정은 미군의 전략이 주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작전’으로 옮겨감에 따라 절정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쟁이 라오스로 1970년에는 캄보디아로 확대되었던 1965년-1975년 동남아시아의 ‘안정’이라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 1960년대 말 미국은 이 전쟁이 당장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혁명적인 전복활동을 견제하는 ‘피로침’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 개입함으로써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베트남에 직접 개입하게 된 1965년의 시각은 아니었다. 미국의 군장성들은 일단 자신들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만 하면 자신의 군사적인 의지를 강제하고 남베트남에서의 소요사태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진정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미국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베트남 정책을 입안할 때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미국이 남베트남에 개입하고, 급기야 전쟁을 접수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 취해진 임시방편의 미봉책들이 쌓인 결과인지?

이 기간 전체를 통해 베트남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선택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했던 두 가지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편 어느 당이 집권하던 미국 행정부는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낭패를 기록할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1950-53년 사이 한국전쟁에서 피비린내 나고 값비싼 군사적 공지를 경험한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의 지상전에서, 특히 이길 수 없는 중공과의 군사적인 대치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책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린든 존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언제나 베트남 분쟁의 전략적인 차원에 엄격한 제한, 예를 들어 북베트남, 또는 전략적으로 심장 지역인 동부 캄보디아와 남동부 라오스에 대한 공격이나, 소련 군사 원조의 주요 통로인 하이퐁에 대한 직접 폭격과 같이 특히 중국의 개입이나 소련의 보복을 초래하여 확전의 양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작전을 자제했다. 어찌 보면 북베트남에 대한 맹렬한 폭격 통상은 제한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이러

한 전략적 자기-제한을 벌충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논리상으로는 ‘승리’를 향해 가지 않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목적을 향해 가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1967년에 이르러 이 전쟁이 본질상 ‘이길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한층 더 명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달갑지 않은 위험도 증가하자 비관주의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으며 행정부로부터 전염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1967년까지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이 지도하는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되었음도 사실이다.

1967년 말에 가서는 이 전쟁에 대해 심각한 장기 의혹이 스멀거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아직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점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노선은 계속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968년 1월말 베트남 구정(Tết) 동안 북베트남과 남부의 반정부활동세력들은 중요한 공세를 취했다. 이 땀 공세는 기본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사기를 꺾고 그 기반을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은 대규모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공세는 바로 대통령선거의 시작에 미국 여론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몰고 가는 공헌을 했다. 이는 또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비판론을 공론화시켰으며 굳어지게 만들었다.

1968년에는 베트남에 파견 미군 숫자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 변화가 있었다. 이와 함께 1968년에는 북베트남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된 폭격이 중지되었다. 또한 전쟁의 ‘탈-가속화’를 가져올 요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전과 남부의 교전 당사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파리에서 회담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남베트남 군대가 점차로 더 많은 군사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정해진 새로운 정책 - 사실 1965년 전 상황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황을 만드는 데까지를 미국이 전념해야 할 최고 목표로 삼았다. 이 정책은 1969년 미국은 실상 분쟁 지역에서 우방국을 ‘대신하기’보다는 ‘뒤에서 미는’ 세계 정책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과 전쟁의 베트남화 즉 미군이 하던 최전선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군대를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데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닉슨 대통령의 첫 임기인 1969년에서 1973년 사이 그와 외무정책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목적은 이 전쟁을 협상으로 타결 짓는 한편 동시에 미국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다고 보여 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여론의 따짐, 비판, 압력을 따돌리고 북베트남의 지도자들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한 축이었다. 다른 한 축은 ‘베트남화’ 계획과 지방에서 ‘평정작업을 강화’함으로써 남베트남 정권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남베트남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에는 미군의 군사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1969년과 1972년 사이 군사력은 더욱 결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까지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이전 민주당 정부를 제약했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자기제한마저도 벗어버렸다. 1969년 캄보디아와의 국경선을 따라 있던 북베트남인과 민족해방전선의 은신처는 체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 1970년 봄 미국-남베트

남 함동 ‘침입’은 캄보디아 내지에 있는 민족해방전선의 피난처에도 미치게 되었다. 1971년 남베트남 지상군이 호찌민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 남부 라오스로 진입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1972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여러 목표지점, 그 중에서도 특히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량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해 미국이 이토록 군사적인 현신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여주었음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가 군사적인 선택권을 다한 1973년 초에는 하나의 전기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달가워하지 않는 남베트남 정부의 동의를 받아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남베트남은 ‘배치가 끝난’ 휴전상태가 될 것이며 사실상 공산주의자 지역과 정부 관할지역이 어우러진 국가 수립에 동의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남베트남 정부 간에 정치적인 협상 타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들이 동원되었지만 미국이 얻어낸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득은 남베트남 정권을 그대로 온전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북베트남이 협상을 통해 얻은 주요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이점은 미국이 군사적인 철수를 마무리할 것임에 반해 북베트남의 군대는 여전히 남베트남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동의에 기초하여 미국은 1970년대 초에 진전된 복잡한 세계정세라는 맥락에서 특히 중소의 분쟁과 대처로 인하여 미국에게는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된 분쟁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이미 전쟁은 북과 남의 베트남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호찌민 루트와 자르 평원(Plain of Jars)같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가차 없이 폭격을 가함에 따라 라오스를 영구적인 내전의 상태로 운명지우고 있었다.

7. 베트남의 통일, 중월전쟁 그리고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973년에 체결된 인도차이나 정전협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첫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있던 비-공산주의 정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주둔을 철폐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앞으로 인도차이나에 있는 비-공산주의 정권들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재도입하여 도와주지 않는 한 군사적 균형은 공산주의자 쪽으로 기울 것이 자명했다.

캄보디아에 관한 한 크메르 루즈가 1973년 정전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크메르 루즈와 크메르 공화국 간의 내전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다. 1973년 여름 이후에는 비-공산주의자 측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가 폭격 지원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정전 협정의 거부는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라오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경하고 교조주의적인 크메르 루즈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와 정책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초기 징후였다.

1974년에 이르러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더욱이 정전은 남베트남 정권이 공고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

었다. 그리하여 1975년 초에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이 개재되었다. 이때쯤 미국은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이를 이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야기된 국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경험으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남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이 중부 고원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남베트남 정권은 처음에는 중부 고원지대에서 그리고 나서는 중부의 해안 지방에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이공과 메콩 델타를 내주었다. 4월말 남베트남 국가는 사라졌다. 라오왕국정부도 베트남에서의 이러한 사건을 이어 급속히 붕괴되었다. 1975년 봄에 캄보디아의 내란 또한 4월 17일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을 점령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종결에 이르렀다. 남베트남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 왔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반-공산주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의해 창설된 이후로 '민족주의적인 정통성' 이라든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립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4년 이후 이 정권의 생존은 미국의 지원이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생명유지 장치의 플러그가 빠지는 순간 이 정권의 붕괴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3년 동안이나 동남아시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분쟁이 끝나게 되었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는 수 년 간의 투쟁과 인내를 보상받은 멋진 승리였다. 아래는 베트남공산당(이전 역사에서는 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 이후에는 베트남노동당으로 알려진)의 당시 총서기 레 주언(Lê Duẩn)이 1975년 봄에 축하한 승리는 1969년 인민혁명정부(People's Revolutionary Government, PRG)를 구성했었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남부의 반란자들에게 단지 '형제의 우애에서 비롯된 지원'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공들인 외관과, 베트남의 통일은 북과 남의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울은 상당히 빨리 제거되었으며, 베트남은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1945년 8월혁명에서 호찌민이 처음으로 잠시 성취했었던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이제 마침내 확보된 것이었다. 레 주언은 남베트남인에게 미국 제국주의의 부패한 잔재를 말끔히 청산한 새롭고 빛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약속했다. 사실 미국은 남베트남 국가를 유지시킬 수 없었지만 남베트남 정부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지역에 전쟁으로 생성된 근대적인 도시 경제(modern urban-enclave economy)를 창출해냈다. 남베트남의 도시 인구는 자본주의를 아는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of capitalism)에서 열린 열매를 맛보았으며, 계속되는 십년 동안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에 통합될 수가 없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만큼이나 문화적인 차이는 통일된 베트남이 이후로 계속 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레 주언은 인도차이나에 있는 세 개의 사회주의 정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권 간에 우애관계가 강고히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3년 반 이후에 이들 정권들은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는 나머지 동남아시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크메르 루즈의 극단성, 특히 프놈펜을 강제로 소개한 사건은 이들 새로운 공산주의자 국가들의 성격에 대해 안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베트남과 라오스

의 공산당들이 초기에 보여준 성명과 행동은 회유적이고 유화적이기는 했어도 1975년 이후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강제 프로그램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인도차이나는 여타의 동남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분명 이들 정권들은 예견이 가능한 장래 동안에는 국내 재건 사업에 몰두할 것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에 내재되어 있는 팽창주의적인 동력에 더하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분쟁을 무장력(‘투쟁’)으로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성향은 인접 국가들에게는 최소한 불편함으로 그리고 최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1975년 베트남, 정확히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의 승리는 싱가포르의 외무장관 라자라트남이 몇 년 전에 예견했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 승리를 세계 공산주의 운동 전체를 향한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원칙을 위한 진일보라고 보았다. 미국 제국주의는 베트남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후퇴한 것으로 보였다.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소련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고도로 모험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었음은 현대 국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돈을 낭비했으며 이념적인 충성밖에는 소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제3세계 정권을 지지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를 흘렸다. 1975년 인도차이나에서 있었던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오만과 폭력을 고무시켰으며, 이는 다시 1980년대와 1990년의 인과응보(nemesis)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사실 인도차이나의 공산주의자 정권은 1975년 이후 군사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들의 폭력은 외부에 있는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기보다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다. 1975년과 1978년 사이에 있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권간의 대립은 역사적,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 ‘후원자들’에게 기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시대에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해주었다. 1954년 이후 시아누크는 점차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70년에서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운이 나빴던 크메르 공화국은 미국에 의존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시아누크처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연계는 크메르 루즈, 또는 그 내부에 있는 가장 유력한 파당이 국내와 국제 문제 모두에서 ‘마오 쩌 둥(毛澤東) 노선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노선은 예전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 구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었다.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의 역사적인 경계심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적인 두려움과 쌍을 이룬다. 1949년 이후 두 나라의 정권이 모두 공산주의적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의혹은 1945년 이후의 시기에도 언제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당

간에 있었던 균열은 북베트남이 중국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소련의 이념적이고 국제적인 노선을 따른 1960년대에는 이념적인 차원을 하나 더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탈식민화되어가고 있던 세계에서 소련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이 베트남-소련 축과 중국-캄보디아 축으로 해서 생성되었음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1977년과 1978년 국경지대 사건이 확대되던 중에 크메르 루즈 정권 내에서도 내부 불화는 점증하고 있었으며, 결국 1978년 12월 베트남과 캄보디아간의 분쟁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베트남과 중국 간의 짧은 국경 전쟁이 뒤를 이었다. 1978년과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발 빠르게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설치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베트남의 타고난 팽창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주었다.

1975년 4월 크메르 루즈 혹은 캄푸치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mpuchea, CPK)은 미국이 지원하는 크메르 공화국에 대항한 5년간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의 적이나 계급의 적 혹은 민족의 적이라고 간주된 모든 이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 3년 반 간을 집권한 소름끼치는 정부가 들어섰다. 폴 포트(Pol Pot, ព៉ុល ពត) 정권은 극단적으로 외부의 것을 싫어하는 고립주의와 단순화된 형태의 마오주의를 결합한 이념을 발판으로 했다. 이 이념은 모든 '봉건적'이거나 '부르조아적'인 흔적을 말 그대로 말소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가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도그마이었다.

이러한 이념과 함께 크메르 루즈 정권에 내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인접 국가들과 과도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1978년 말 이러한 대결국면은 민주 캄푸치아(크메르 루즈가 자신들의 정권을 불렀던 이름)와 새로이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베트남이 바로 승리했으며 헝 삼린(Heng Samrin)과 다른 반체제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정권,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PRK)이 들어섰다. 중국은 1979년 2월 자신의 동맹자인 크메르 루즈와 함께 베트남에 보복하기 위해 북베트남 국경 지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중월전쟁으로 알려진 중국의 이 공격은 베트남의 반격을 받았으며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적군은 약체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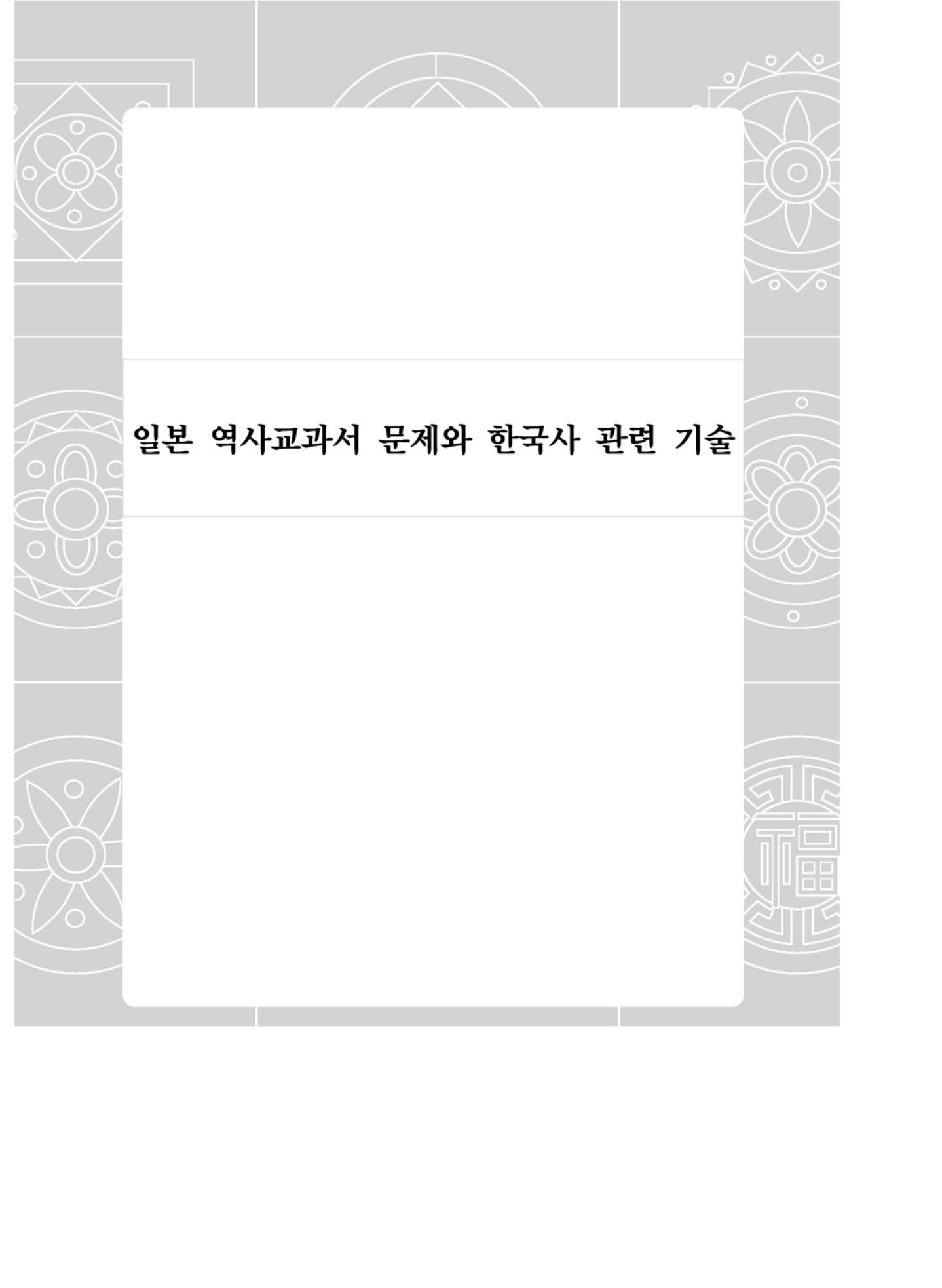
이 지역과 너머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베트남이 우세를 점하는 공산주의 인도차이나를 만들어내려는 베트남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간주했다. 이에 더해 베트남이 소련과 전략적이자 이념적인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베트남의 팽창은 바로 소련의 힘을 이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킴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1978년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막강한 비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베트남과 그 대리인인 소련의 야심을 제어하고자 했다. 베트남이 지원한 캄보디아 정권이 1980년대를 통해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 베트남으로서는 군사 점령을 계속하는 데에 드는 커다란 부담에 더하여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소련이 그 세계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감에 더하여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상황은 이 날 이후 국제연합이 주요 정치 야당세

력들 간의 타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제화’되었다.

[보론 : 동아시아와 베트남난민(보트피플)]

참고할 서적

1.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2.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3. 노영순 역,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The background features a repeating pattern of traditional Korean decorative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geometric designs, rendered in a light gray color against a darker gray background. The central text is contained within a white rectangular area.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관련 기술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관련 기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란

일본 역사교과에 한국사 관련 내용이나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관련 기술이나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왜곡되어 있거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문제로,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한일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기술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은 부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1993년 고노 담화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2014년 3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검정을 실시하는 역사교과서에도 이러한 담화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노 담화는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역사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기억하고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화를 부정하는 기술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은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둘째, 교과서는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데, 왜곡된 교과서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1974년 11월 19일,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교과서로 학습할 경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침략의 피해를 받은 국가의 역사 인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사히신문이 2013년 12월 20대와 30대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30대 이상에 비해 역사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침략전쟁은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도조 히데키 등 전범도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30대 이상은 84%가 알고 있지만 20대는 56%밖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찬성이 60%이고 반대는 15%에 불과합니다. 20대는 침략전쟁이었다는 답변도 45%로 30대 이상에 비해 10%나 적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찬성하고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역사교육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1〉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중 역사인식 관련 부분(2013.12.29)

	질문	답변		
		20대	30대 이상	
1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60	59
		반대	15	22
2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지도자였던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전범도 모셔져있다. 이 사실을 아는가?	알고 있다	56	84
		모른다	43	15
3	이 전쟁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가?	침략전쟁이었다	45	55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33	26

셋째, 2001년 김정결과 발표 때까지는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독도 기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8일 교과서 기술의 근거가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개정되어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및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었습니다. 향후 일본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적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도가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라고 기술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모든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독도에 대해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으로,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도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 미래세대가 과연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2.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차 내각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애국심 조항’이었다. 찬성론은 자학사관 극복을 위한 애국심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반대론은 강요된 애국심의 위험성을 내세웠다. 그런데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보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A)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B)를 기를 것”이라는 교육 목표(5항)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주의(B)와 애국주의(A)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은 일본 교과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 우익세력은 교과서가 ‘자학적이고 반일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일본 교과서에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1945년 8월 이후 일본의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 교과서 문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3〉 일본 교과서 문제 연표

연도	애국주의	국제주의
1946		일본 문부성 발간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기술
1949		교과서제도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경
1955	민주당(여당), 『걱정스런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 배포	
1965		이에나가 사부로가 교과서 검정제도는 위헌·위법 소송 제기
1970		이에나가 소송 1심 판결, 검정은 헌법과 교육법 위반
1974		고등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재등장
1975		중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재등장
1980	자민당(여당)이 당 기관지에 “지금 교과서는 -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연재	
1982	고등학교 검정결과 발표(아사히신문이 중국 화북(華北) 침략이 진출로 바뀌었다고 보도)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 담화 발표,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제국조항’ 신설
1984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난징대학살 기술
1985		모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난징대학살 기술
1986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원서방(原書房)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 발간	
1993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발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 표명
1994		1993, 1994 검정통과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위안부’ 기술(23종 중 22종)
1995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발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 표명
1996	‘밝은 일본·국회의원 연맹’ 결성,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결성	검정 통과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전부에 ‘위안부’ 기술
1997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결성	
1999	국기·국가법 제정	
2001	‘새역모’, 부상사(扶桑社)에서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 발간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5	중학교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 8종 중 2종으로 감소	민간단체인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발간
2006	‘새역모’와 ‘일본교육재생기구’ 분열, 교육기본법 개정(‘애국심’ 조항 신설)	
2007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8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명기	

2011	‘새역모’와 ‘일본교육재생기구’ 자유사(自由社), 육봉사(育鵬社)에서 역사/공민교과서 발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사라짐, 모든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 기술	
2014	중·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명기	
2015	검정통과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 18종 전부에 독도는 일본영토 기술	마나비사(学び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
2016	검정통과 고등학교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 24종 전부에 독도는 일본영토 기술	
2017	초등학교,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해설서에는 한국 불법점거 명기)	

2-1. 제1기 : 패전에서 제1차 교과서 공격 전까지(1945-1955)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전쟁 당시 황국사관에 의해 기술된 교과서는 폐기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발행되었습니다. 1946년 문부성은 『나라의 발자취』, 『일본 역사』를 발간했는데 난징대학살이 기술되었습니다. 1949년부터는 교과서 발행이 국정제도에서 검정제도로 변경되었는데, 많은 교과서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략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기술되었습니다. 점령시기 출판된 교과서는 한계는 있었지만, 전쟁 당시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2-2. 제2기 : ‘제1차 교과서 공격’에서 ‘스기모토 판결’ 전까지(1955-1970)

점령이 끝나고 독립하자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955년 8월, 여당인 민주당이 『걱정스런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1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의 초점은 일본교직원조합이 편향된 교과서로 좌편향적 정치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침략한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일본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교과서 검정을 통해 기술 내용을 통제합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가 쓴 교과서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반성을 추구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학습을 통해서 선조의 노력을 인식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풍부한 애정을 키운다는 일본사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나가 교수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반성을 추구하

려고 하는’게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한다’는 이유때문이라면, 이러한 생각은 일본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항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교과서 기술을 강력하게 통제한 결과, 일본의 침략과 가해에 대한 기술을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과서 통제에 대해 1965년 12월, 1957년 12월 교과서 집필자가, 1960년에는 역사학협회와 역사학 관련 9개 학회가 각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도쿄교육대학)가 1965년 교과서 검정제도는 위헌·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제1차 소송). 그리고 1967년, 1968년도용 교과서 검정에서 3건 6곳의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제2차 소송).

2-3. 제3기 : ‘스기모토 판결’에서 ‘제2차 교과서 공격’ 까지(1970-1982)

제1차 교과서 공격으로 사라졌던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것은 1974년판 고등학교 일본사와 1975년판 중학교 교과서부터입니다. 재등장의 배경으로는 첫째, 1970년 스기모토 료기치(杉元良吉) 재판장이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과서 검정 위헌 소송에 대해 “교과서의 사상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교과서 내용 개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 검정은 헌법과 교육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이나바 오사무(稲葉修) 문부대신이 동년 9월 29일 국회에서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국민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후 초중등 교육과 그 밖의 사회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야스나가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고 답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국 침략에 대해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나바 문부대신의 발언은 중일공동성명에서 밝힌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이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 영향을 줍니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이 1974년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1975년판 개정판에 다시 등장합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자 보수 세력에 의한 교과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합니다. 1980년 1월 여당인 자민당이 당 기관지 『자유신보』에 “지금 교과서는-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연재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됩니다. 동년 7월에는 오키노 세이스케(奥野誠亮) 법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과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피하고 있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점점 확대됩니다.

(자료4)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관련 기술 변화

주제		기술 시기
식민지 지배	타이완 식민지화·저항	1978 (東書), 1993 (日書), 1997 (帝國,大阪,日文), 2002 (敎出), 2012 (清水)
	동화(황민화)정책 (타이완)	1997 (帝國,日文), 2002 (日書,敎出), 2006 (東書), 2012 (清水)
	강계동원(대만)	1981 (日書), 1990 (敎出), 1993 (清水,中敎), 2012 (帝國)
	한국병합(식민지화)	1952 (日書,清水), 1955 (敎出,帝國), 1956 (東書,大阪), 1957 (中敎)
	식민지 가해 실태 (한국)	1966 (日書), 1975 (東書,敎出), 1978 (帝國,大阪,清水,中敎)
	황민화정책(한국)	1984 (東書), 1987 (中敎,大阪), 1990 (敎出), 1993 (日書,帝國), 1997 (清水)
	3·1운동	1957 (日書), 1962 (敎出,中敎), 1969 (大阪), 1972 (帝國,清水), 1975 (東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66 (日書), 1975 (大阪), 1978 (東書,敎出,中敎,帝國,清水)
	강계동원(한국)	1966 (日書), 1974 (敎出), 1978 (中敎,帝國,清水), 1981 (東書,大阪)
	일본군·위안부'	1997 (日書,東書,敎出,帝國,清水,大阪,日文) 2002 (日新,清水,帝國), 2006 (日新,帝國), 2012(없음)
침략전쟁	중국침략(용어)	1984 (日書,東書,敎出,大阪,清水,中敎), 1990 (帝國)
	난징대학살	1975 (日書), 1978 (東書,敎出), 1981 (中敎), 1984 (大阪), 1987 (清水), 1990 (帝國)
	동남아시아 침략	1981 (日書), 1978 (東書,敎出,帝國,大阪), 1981 (清水), 1987 (中敎)

(㉞) 日書(日本書籍), 東書(東京書籍), 敎出(教育出版), 帝國(帝國書院), 清水(清水書院), 大阪(大阪書籍), 日文(日本文教出版), 中敎(中敎出版)

2-4. 제4기 : '1982년 교과서 파동'에서 1966년 중학교 교과서 일본군·위안부' 기술까지 (1982-1996)

제2차 교과서 공격을 배경으로 진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토에서 문부성에 의해 '침략'이 '진출'로 바뀌고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대폭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1982년 6월 26일 일본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동년 8월 26일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역사교과서에 관한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린제국조항이란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된 역사적 사상(事象)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으로, 교과서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내용도 사실대로 기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에서 13개항 19가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침략, △토지약탈, △3·1운동, △신사참배 강요, △한국어 말살, △창씨개명 강요 등 4개항 6가지 내용에 대한 즉각 수정을 약속합니다.

제2차 교과서 공격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을 축소시키려던 보수 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1984년판 중학교 교과서, 1985년판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난징대학살이 기술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개선된 것은 이어나가 사부로를 비롯한 집필자 및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웃 국가의 외교적 압력의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 기술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웃 국가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접어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필두로 일본 정부에 대해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아시아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됩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및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와 군이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사죄했고,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총리가 담화를 통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교과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993년과 1994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일본사A/B 교과서 23종 중 22종, 1996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전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기술되었습니다. 1997년도 대학센터시험(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함)에는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¹⁾

2-5. 제5기 :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공격(1993-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 교과서 기술 개선이 제3차 교과서 공격을 불러옵니다. 1993년 8월, 자민당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고, △난징대학살과 일본군·위안부’는 허구로, △침략과 가해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와의 ‘싸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자를 동원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996년 6월에는 ‘밝은 일본·국회의원 연맹’, 1997년 2월에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이 결성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략국가로 최악시 하는 자학적 역사인식과 비굴한 사죄외교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1998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마치무라 노

1) 藤野信勝, 「作問の原則を逸脱したセンター入試問題」(<http://www.jiyuushikan.org/rekishi/rekishi79.html>). 후지오카(藤岡)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사와 세계사 시험에 강제연행 문제가 7차례 출제된다. 2004년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관련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부나가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있는게 특히 메이지 이후 부정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열거하고 있다며 기술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1996년 12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가 결성됩니다. ‘새역모’는 결성 초기에는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군·위안부’를 기술한 것은 ‘자학사관’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직접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를 직접 발간합니다.

2001년 이후 일본 교과서 문제는 ‘새역모’ 계열(2006년 10월 ‘새역모’는 ‘새역모’와 ‘일본교육재생기구’론 분열)에 의해 발간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에도 난징대학살, 황민화 정책, 강제동원 등 침략전쟁과 식민지로 인한 가해사실도 간략하게나마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역모’ 교과서에 이러한 기술이 들어간 것은 검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검정이 교과서 기술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9년 검정에서는 난징대학살 기술에 대해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새역모’에 의한 공격의 결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1996년 7종 중 7종, 2001년 8종 중 3종, 2005년 8종 중 2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는 등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새역모’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났고 채택률도 0.039%(2001년)에서 3.8%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채택률은 약 6.3%로 증가합니다.

2012년 12월 다시 집권한 아베 총리는 총리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자민당 내에 설치한 ‘교육재생실행본부’를 중심으로 교육 관련 제도 개정 추진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과서의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 검정 문제 검토 특별부회(部會)’는 2013년 5월 28일 자민당 국회의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서적(東京書籍), 실교출판(実教出版), 교육출판(教育出版)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자리에서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문제, 영토문제 등에 관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질의하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 ‘편향되어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²⁾ 2014년 1월 17일에는 검정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검정기준에 특정 사실을 너무 강조하지 않을 것,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는 그것을 명시하고 아동·생도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할 것, 각의결정 기타 방법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와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을 경우 이에 기초한 기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월 28일에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여 일본정부 견해를 반영하여 독도,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朝日新聞』 2013년 5월 30일

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일본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는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6학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일본사(A/B), 세계사(A/B)입니다.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고등학교는 세계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왜곡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이 ‘애국심’을 강조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기본법(2006.12), 학습지도요령(2008.3), 학습지도요령해설서(2008.7)를 근거로 집필된 것입니다. 개정 교육기본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애국심’조항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의 목표) 5항을 보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내용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역시 역사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 “역사를 통해 국제관계와 문화교류의 즐거움을 이해시켜, 우리나라와 여러 외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타 민족의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국제협조의 정신을 배양한다”는 내용도 명기하고 있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익 모임인 교과서문제연구회의 “교육기본법에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제2조 교육의 목표 3)고 되어 있고 학습지도요령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역사적 분야의 목표 1)라고 되어 있는데”라는 주장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우익 세력은 ‘국제협조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하고 ‘애국심’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의 구체적인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일본의 한국 침략 관련 내용을 보면, 학습지도요령에는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해설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료5)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일본 식민지 지배와 침략 관련 기술 변화

시기	주요 내용
19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이 대륙진출에서 전쟁으로의 길을 걸었다. -특히 전쟁(태평양전쟁)이 초래한 일류의 불행에 대해 깊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전쟁(러일전쟁)이 아시아의 민족적 자각을 고양시킨 것을 다룬다. 또한 러일전쟁 당시 국내 일부에 반전론이 있었다는 사실과 민족적 자각이 나중에는 대국의식이 되어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 등을 다룬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초기에 걸쳐 조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중략) 일본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정세의 추이를 다룬다. -일본의 대륙진출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전쟁 중의 국민생활에 대해서는 이 대전이 이른바 총력전으로, 일화사변(日華事變) 이후 장기전으로 인해 물자가 극도로 부족하여 국민생활이 곤란해진 점,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해 동원된 사실을 다룬다. 패전에 대해서는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 소비에트연방의 대일선전도 있어 결국 불리하게 되어 결국 패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해시킨다.
19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이 전쟁(러일전쟁)의 승리가 한편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적 자각을 촉진시켰으나, 그 반면 일본인이 여러 민족에 대한 지도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한다. 러일전쟁 후의 대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병합에 대해 그 사정을 이해시킨다. -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민족운동이 발흥하고 발전을 보였다는 점, 특히 중국혁명의 진전, 인도의 독립운동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시킨다. -이 경향이 군부의 대두를 초래하여 중국대륙으로 진출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파악시킨다. -그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사실에 착목시켜, 원자력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19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전쟁의 경과 및 결과, 국내외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러일전쟁 후의 한국 식민지화와 중국의 민족운동, 중화민국의 성립과 더불어 아시아 정세를 폭 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에서의 민족운동이 고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군부의 대두를 초래, 결국 중국대륙으로의 진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또한, 대전이 인류 전체에 많은 참화를 초래한 점을 토대로,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19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대륙을 둘러싼 당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움직임, 전쟁의 개요와 국내외 반응, 한국 식민지화 등을 다룬다. -그 때, 중국과 조선에서의 ‘민족운동의 고양’과 국제연맹의 설립과 군축조약 체결로 대표되는 ‘국제평화의 노력’을 깨닫도록 한다. -군부가 대두하여 대륙으로 세력 확장한 사실, (중략) 이해시킨다.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커다란 전화(戰禍)를 입은 사실, 나아가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썼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깨닫게'(내용의 취급)하도록 한다.
2008.7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이 무렵의 대륙과의 관계에 주목시켜'(내용의 취급)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움직임, 전쟁의 개요와 국내외 반응, <u>한국 식민지화 등을 다룬다.</u> - '민족운동의 고양과 국제협조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과 <u>조선에서의 민족운동 고양</u> , 국제연맹 설립과 군축조약의 체결 등을 다루도록 한다. - 군부가 대두하여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한 사실,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 한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실, 각지에의 공습,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가사키에의 원자폭탄 투하 등, 우리나라의 국민이 커다란 전화를 입은 사실 등으로부터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미쳤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내용의 취급)는 것을 깨닫게 한다.

3-2. 교과서 검정제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1980년대까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료6〉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수정지시 사례

검정 연도	과목	검정 제출 원고	수정지시 ³⁾
1973	고교 일본사	태평양전쟁	일본에서는 대동아전쟁이라고 했다. (1974, p.19)
1976	중학 역사	(조선으로의 침략, 한국병합) “(조선인이) 토지를 빼앗겼다”, “토지를 잃어버려”	사실에 반한다. 토지조사의 결과다. (1977, p.12)
	고교 일본사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중일전쟁의 포로로 연행된 중국인과 함께 전혀 인권을 무시한 노예적 노동을 강요당했다.	‘강제적으로 연행되어’는 실태로서는 그렇지만, 일본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은 아니다. 국민징용령에 의해로 하는 것은 어떤가. “전혀 인권을 무시한 노예적 노동”도 많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부가 그랬었는지 어떤지는 당시 실정을 토대로 검토할 것(1977, p.20)
1977	고교 세계사	일본의 중국침략	안 된다. ‘침략’은 진출 혹은 침입으로 할 것(1979, p.24)

1979	중학 역사	많은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 본토로 이주당해	당시 조선은 일본령으로, 국민징용령에 의해 모집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1980, p.31)
1981	고교 현대 사회	침략	‘침공’, ‘침입’, ‘침출’을 사용하기 바람. ‘침략’에는 나쁘다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음.(1982, p.13)
	고교 일본사	중국에서는 서안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정부와 공산당의 항일통일전선이 성립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중국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경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서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진출’, ‘침입’ 등의 단어로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합성을 유지할 것. 자국의 역사 교과서라는 입자에서도 ‘침략’이라는 단어는 어떨지 의문이다.(1982, p.49)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료7〉 2001년 검정 사례(육봉사)

신청 내용	검정의견	수정 내용
1910(메이지43)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한국병합).① 이것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구미열강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② 한국병합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꼭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단 실행되었던 당시로서는 ③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당연히 병합에 반대하는 찬비양론이 있었고 반대파의 일부로부터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① 일본의 한국병합 시 서구열강이 병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② 한국병합에 대해 일면적으로 ‘필요’성과 ‘이익’이 기술되어 병합과 통치의 실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③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만 기술하는 것은 병합과정의 실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④ 한국 국내의 병합 반대파의 ‘격렬한 저항’이 일부밖에 없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②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①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조선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10(메이지43)년 일본은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배경으로 억압하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합). ④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 병합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족의 독립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 그 후에도 독립회복을 위한 운동이 끈질기게 전개되었다. 한국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로 만든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경작지에서 쫓겨나는 농민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존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강화했다. ③ 삭제

3) 연도와 쪽수는 『教科書レポート』 출판연도와 상기 내용이 기술된 쪽수


[국민의 동원](전체)	대만과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래 내용 추가> 이러한 징용과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실시되어 조선과 대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희생과 고통을 주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조선인과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와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역 당했다. 또한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황민화정책이 강화되어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
--------------	--	--

3-3. 왜곡 사례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사 및 침략전쟁 관련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2015년 검정을 통과하여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비판 논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2-1. 식민사관에 기초한 고대 동아시아 관계사 기술

<고대국가의 영역 표시>

출판사	교과서 내용
東京書籍 (p.27)	 <p>도판 <기원전 2세기말의 세계></p>
日本文教出版 (p.23)	<p>본격적인 국가의 형성은 기원전 2세기말, 한에 의한 낙랑군을 포함한 4군 설치 이후로 추정된다. 나중에는 북쪽에 고구려, 남쪽에는 몇 개의 소국이 생겼다.</p>

帝國書院
(p.17)



도판 <⑤ 기원전·후의 동아시아>

기원전 202년에 진의 뒤를 이은 한 왕조(전한)는 중앙아시아와 베트남 북부, 그리고 조선반도 북부에도 세력을 확장하였다.(p.19)



도판 <그림⑥ 기원전 2세기경 동아시아> (p.19)

清水書院
(p.19,
p.20~21,
p.24)



도판 <로마제국과 한(漢) -기원전후 무렵의 세계-> (p.20~21)

	<p>→ 後漢の皇帝が高句麗の王にあたる印 (1辺の長さ2.4cm)</p> <p>なぜ高句麗の支配者は中国の皇帝にあつては印をおくつたのだろうか?</p> <p>1 高麗の皇帝が高麗地方にいた王にあつた印 (1辺の長さ2.4cm)</p> <p>「高麗新羅王」印 高麗の皇帝が高麗にさげられたものとする。一切は2.5cm、重さ10g。材質は金。[1784年、羅城南志賀遺跡出土。羅城市博物館蔵]</p> <p>3世紀ごろの東アジアと中国の皇帝が各領の支配者にさげた印</p> <p>도판 <3세기경의 동아시아>(p.24)</p>
<p>育鵬社 (p.29,32)</p>	<p>3世紀ごろの東アジア</p> <p>도판 <3세기경 동아시아>(p.29)</p>
	<p>3世紀後半(280年ごろ)の世界</p> <p>シルクロード — 陸上交通線 — 海上交通線</p> <p>도판 <3세기 후반(280년 경)의 세계> (p.32)</p>

<p>自由社 (p.40)</p>	
<p>学び舎 (p.21,35)</p>	
	<p><히미코에게도 금도장이 하사되다> 3세기가 되자 중국에서는 한이 멸망하고 위·오·촉이 분립되어 다투는 3국시대가 되었다. 북방에 있었던 위가 조선반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관청을 설치하자 히미코는 곧바로 사신을 보냈다.(p.35)</p>

<광개토대왕비문 해석>

출판사	교과서 내용
日本文教出版 (p.35)	<p>조선반도에서는 6세기에 신라·백제의 세력이 커졌다.</p> <p>(칼럼)<이와이의 난> 6세기가 되자 신라·백제의 세력이 가야지방으로 미쳤다. 야마토 왕권은 군대를 보내 가야지방에서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였다. (중략) 6세기 중엽 가야지방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야마토 왕권은 조선반도에서의 창구를 잃었다.</p>
帝國書院 (p.32)	<p>6세기가 되자 조선반도에서는 왜국과 관계가 있었던 가라 제국이 멸망하고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왜국은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p>
育鵬社 (p.34-35)	<p>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6세기가 되어 신라가 세력을 뻗치게 되자 우호관계에 있던 백제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자가 종종 찾아왔다. 신라는 임나에도 진출하여 6세기 중반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후퇴하였다.(p.34-35)</p> <div data-bbox="704 833 775 1064" style="text-align: center;"> </div> <p>도판 <④광개토왕 비문 일부> 왜가 조선반도에 출병하여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켰다고 쓰여 있다.(p.35)</p>
自由社 (p.7, p.48)	<p>이 비문으로부터 왜(일본)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한 것을 알 수 있어.(p.7)</p> <div data-bbox="632 1225 846 1456" style="text-align: center;"> </div> <p>도판 <고구려 광개토왕(호태왕)비> 높이 6.4m. 비문에는 광개토왕의 사적이 기록되어있고 조선반도에 출병한 일본과 고구려가 싸운 모습도 알 수 있다. 현재 광개토왕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중국령이 되어 있다.(p.48)</p>

	<p>조선반도 남부에는 4세기경부터 다수의 소국가로 분리된 지역이 있었다. 일본서기에서는 임나, 조선 측 호칭으로는 가라, 또는 가야로 총칭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백제와 함께 일본열도 사람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임나는 철의 산지이고, 야마토 조정은 이 땅으로부터 철을 수입하여 지방에 분배함으로써 국내 통일을 추진하였다고 보인다.</p> <p>고구려에게 공격당한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 비문에는 왜의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후 고구려왕이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마토 조정은 고구려와 싸웠지만 점차 형세가 불리해져 404년 조선반도에서 철퇴하였다.(p.48)</p>
<p>自由社 (p.49)</p>	<p><중국 사료와 명문에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1년 왜가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다. -404년 왜와 고구려가 교전하여 왜가 조선반도로부터 철퇴하다. -562년 신라에 의해 임나가 병합되다.(p.49) <p>한편 신라는 임나의 영유를 백제와 다투어 562년에는 임나를 병합하였다. 이렇게 임나는 멸망하였다. 신라는 이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게 임나의 산물을 보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였다.(p.49)</p>

3-2-2.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 지배 축소 기술 및 정당화

<러일전쟁>

출판사	교과서 내용
<p>自由社 (p.193, p.195, p.208)</p>	<p>[러일전쟁 개전으로]</p> <p>일본의 10배나 되는 국가예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만주의 병력을 증강하고, 압록강 하구 용암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묵시한다면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맞서지 못할 정도로 증강될 것임은 분명했다(주4). 정부는 때를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의했다.(p.193)</p> <p>[세계를 바꾼 일본의 승리]</p> <p>러일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일본은 이에 승리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했다. 근대국가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의 승리는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여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p.195)</p> <p><칼럼 외부의 눈으로 본 일본; 세계가 본 러일전쟁-유색인종 아시아 민족이 독립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품게 되었다></p> <p>[아시아인의 반응]</p> <p>“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배를 타고 아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지나자 많은 현지인이 내가 황색인종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전에는 우리 동아시아의 유색인종은 서방의 백색인종의 압박을 받았고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는 것은 동방민족이 서방민족을 이긴 것이 된다. 일본인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도 이겨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한다.’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결과, 아시아민족이 독립에 대한 큰 희망을</p>

	<p>품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쑨원이 관찰한 러일전쟁에 대한 아시아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독립에의 의욕을 고무] 쑨원이 관찰한 것을 전 세계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 운동가이자 훗날 수상이 된 네루는 “만약 일본이 가장 강대한 유럽의 한 나라에게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것을 인도가 이룰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습니다. 이집트의 민족운동 지도자 무스타파 카밀은 “일본인이야말로 유럽에게 분수를 알게 한 유일한 동양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시인 시라지는 “입헌제를 통해서 일본은 강대해졌다. 그 결과 이처럼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일본이 승리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p.208)</p>
<p>育鵬社 (p.191, p.192)</p>	<p>[러일전쟁] 러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을 이대로 묵인한다면, 우리나라는 존립 위기를 맞게 되리라 생각한 정부는 전쟁을 결의하고, 1904(메이지 37)년 2월,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p.191)</p> <p>[일본에 대한 기대와 경계] 또한, 같은 유색민족이 세계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를 물리쳤다는 사실은 열강의 압박과 식민지 지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네루와 중국 혁명의 지도자 쑨원은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준 감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난 근대화와 독립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이 전쟁의 영향이 있었습니다.(p.192)</p>
<p>教育出版 (p.178, p.179)</p>	<p>만물 점령한 러시아는 청과의 조약으로 군사를 철수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기한이 와도 철병하지 않고 <u>한국에도 군사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u> 위기감이 고조된 일본정부는 외교적 교섭으로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익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p.178)</p> <p>또한 일본의 승리는 열강의 침략과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국, 인도, 터기 등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족독립과 근대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p.179)</p>
<p>東京書籍 p.179</p>	<p>[러일전쟁 후의 일본] 한편,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베트남 등, 구미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자극을 주어 민족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제국주의국가로서 아시아 민족과 접하게 되었습니다.</p>

<강제 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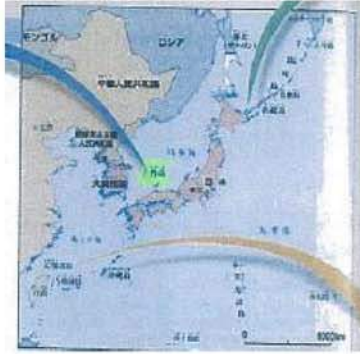
출판사	교과서 내용
日本文教 出版 (p.194)	1909(메이지42)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민족운동가 안중근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하였다. 이를 한국병합이라고 한다.
育鵬社 (P.192)	또한 러일전쟁 중에는 미국의 필리핀 영유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서로 지지하는 내용의 합의가 미일 간에 성립하였다. 게다가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이 인정되었다. 그 후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가지게 되어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自由社 (p.198)	구미열강은 러시아의 북만주·몽고, 영국령 인도, 미국령 필리핀 등 자국의 식민지 지배를 일본이 승인하는 대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를 승인하였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국으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식민지 조선 개발론>

출판사	교과서 내용
帝國書院 (p.182~183)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추진되어 철도 등이 정비되는 한편,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지리를 배우고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칠 기회는 줄어들었다.
育鵬社 (p.193)	우리나라의 조선통치에서는 병합의 일환으로 근대화가 추진되었지만 쌀 수확을 강요당하거나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강해졌다.
自由社 (p.198~199)	병합 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철도·관개시설을 만드는 등 개발을 실시하였고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도 개설하여 일본어 교육과 함께 한글 문자를 도입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석③ 이들 근대화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민도 있었다. 그 외 조선의 전통을 무시한 여러 가지 동화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그러나 36년간의 조선 통치로 인구는 2배가 되었고 경작지도 크게 늘었다.

3-2-3.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출판사	교과서 내용
<p>東京書籍</p>	<p>5. 국경과 영토의 획정(p.168) 지도1. (국경과 영토 획정 지도)(p.168)</p>
	<p>(각주 설명)(p.168) 동지나해의 센카쿠제도(釣台列島)는 1895년에 오키나와현에, 일본해의 '竹島'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p>
	<p>(표내 설명) 메이지시대의 외교(p.169) -1905년 竹島の 일본령으로의 편입을 각의결정하다.</p> <p>(각주 설명)(p.251) 한국과의 사이에는 '竹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p.252)</p>



지도2. 제목 없음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p.252)
竹島

‘竹島’에서는 에도초기부터 막부의 허가를 얻은 돗토리번의 초년이 어업을 하고 강치와 진북 소리를 채취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강치잡이가 본격화된 것을 영향 받아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중인 1905 (메이지38) 년 1월에 각의결정을 해서 ‘竹島’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2월 22일에 지사가 고시했습니다. 이 후 竹島에서의 어업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1941년(소화16)년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선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어 그 선안에 ‘竹島’를 포함시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엄중히 항의했습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은 竹島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竹島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2005년(헤이세 17)에 ‘竹島’가 시마네현에 편입을 고시한 2월 22일을 ‘竹島의 날’로 제정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료1. 시마네현 고시(시마네현 竹島자료실 소장)(p.252)



사진1. 메이지 시대의 竹島(개인 소장)-1907년경 시마네현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과 그 설명문(p.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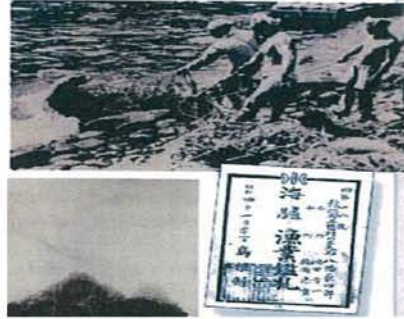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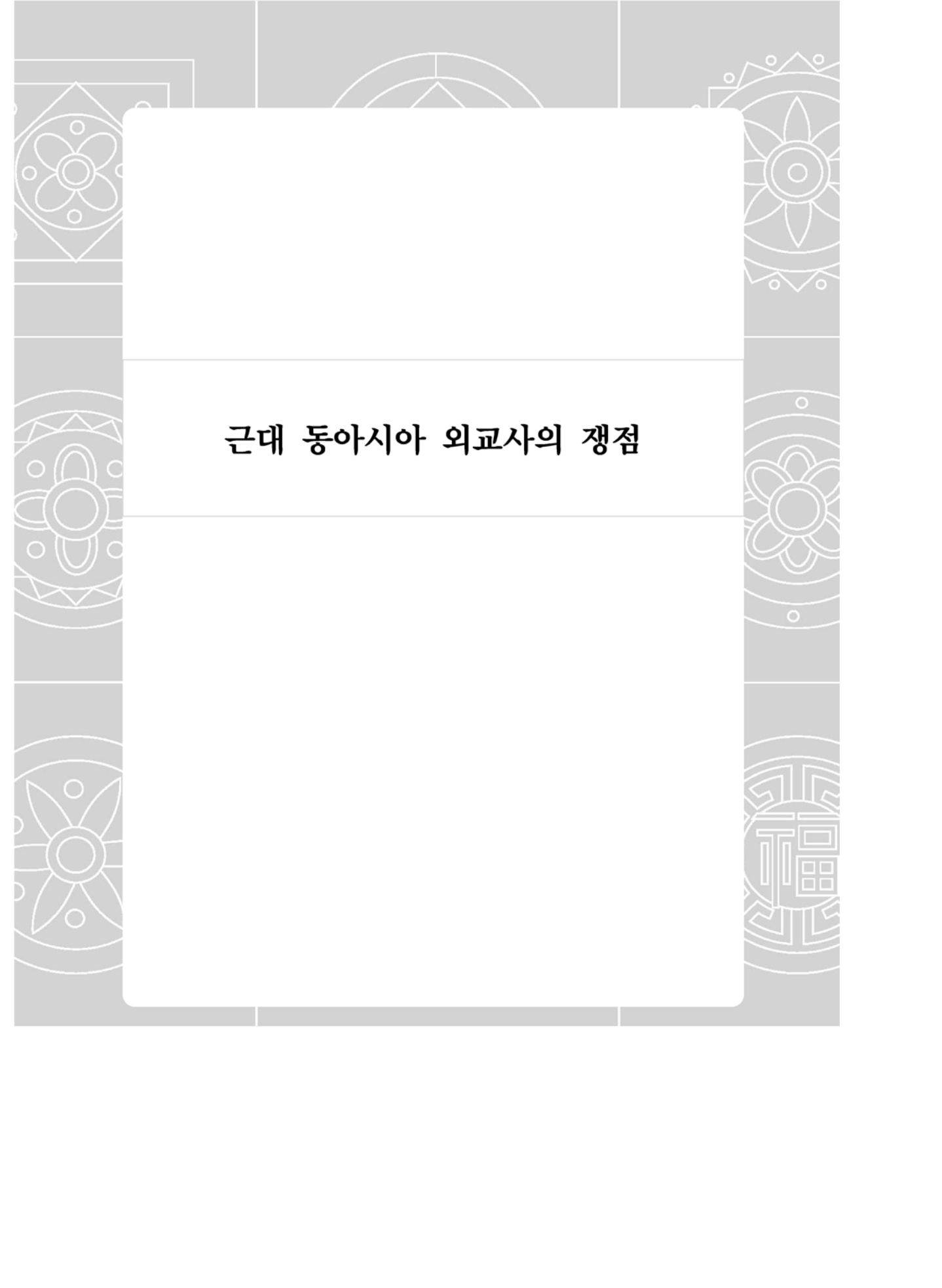


사진2. 강치 조업 모습(1935년)과 강치 조업 허가증(아래)(시마네현 竹島자료실 소장)(p.252)

The background features a grey field with white line-art pattern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bands of repeating circular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geometric designs. At the top center, there is a semi-circular arch-like pattern. A large white rectangular box is centered on the page, containing the title text.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의 쟁점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의 쟁점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개항’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동
- III. 조공(책봉)체제와 조약체제에 대한 바른 이해
- IV. 전망: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I

‘동아시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문제를 다룬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어디 한 두 가지이겠는가 만은 혹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야스쿠니(靖國 Yasukuni) 신사 혹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ianfu, comfortwomen)’를 또 어떤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그것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東北工程’(dongbei gongcheng, Northeast Project)을 떠올릴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獨島, Dokdo) 또한 국제법이 통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의 歷史 및 地理書에 자주 등장했던 경위를 고려한다면, 응당 역사와 떼어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분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섬이다. 일본이 줄기차게 그 영유권을 부당히 주장하고 있기에 그 대응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역사문제’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또한 없는 형편이다.

굳이 이 ‘동아시아의 역사갈등 문제를 다룬다’라는 명제에만 ‘동아시아’를 국한시킨다면, 그 ‘동아시아’에는 한중일 3국과 북한 좀더 나아가 타이완과 몽골, 베트남 등이 해당될 듯싶다. 섬 나라 타이완의 경우는 대륙 중국과의 사이에 ‘분리 독립’이나 ‘통일’이라는 갈등 때문에 ‘동아시아’에 응당 해당이 되겠지만, 몽골은 어째서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예로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중국인과 몽골인에게 물

있을 경우 제각기 자국 ‘역사’에 속한 위인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 양국이 역사갈등의 ‘불발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얼마든지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논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하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이른바 글로벌시대에 한국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로만은 자국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번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접 국가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앞서 열거한 갈등거리들도 따지고 보면 거의가 다 서구 帝國主義의 산물 혹은 부산물이다.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팽창적 국가주의나 식민주주의(colonialism)에 의해 이전의 ‘동아시아’가 해체되고 새로이 재구축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또 수용치 않고 있었던, 기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다름아닌 조공책봉(朝貢冊封)체제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유교 이념에 기초를 둔 화이관(華夷觀)에 의해 국가 간 서계(序階, hierarchy)가 결정되고 또 국가에 따라 조공과 책봉 즉 봉공(封貢)의 예(禮)가 달라져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국제질서 체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대등/평등을 기조로 하여 국제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대등/평등치 않음은 물론 오히려 국가 간의 서계의 폭과 차등이 더 넓어져 있음을 생각해 보면, 근대 이전의 그러한 국제질서 체제가 일견 ‘합리적’일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였다.

II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무력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여 토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 정권의 국시(國是)였던 쇠국체제의 붕괴와 함께 왕정복고 쿠데타를 통해 천황정치를 회복시킨 메이지(明治) 정부는 유럽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앞세워 조선과 청(淸)이 견지하고 있었던 조공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패자(覇者) 청의 막연하고 느슨했던 이른바 ‘천자(天子)의 영토’에 대한 ‘구획정리(區劃整理)’를 통해 ‘근대적’의미의 국경을 획정(劃定)하고자 함에 다름 아니었다.

메이지 일본이 ‘처분(處分, shobun [lit. disposition])’을 통해 획득한 유구(琉球, Liuqiu, Ryukyu [현재의 오키나와, 沖縄])는 청의 무관심의 결과였지만, 조공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조선만큼은 청도 결단코 ‘양보’할 수 없어 구차하지만 ‘조규[條規(tiaogui=regulation)]체제’로의 체제 변혁을 통해서나마 속방(屬邦)으로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청의 패권 즉 구체제를 부정

(=탈아[脫亞, datsua])하고 ‘근대적’ 국경획정을 피하려는 일본과 수 차례의 충돌(임오군란·갑신정변·청일전쟁) 끝에 결국 구체제는 붕괴하고 만다. 근대의 ‘동아시아’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동아시아’는 한때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연대하자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이내 일본 군국주의의 ‘웃’을 입힌 천황주의에 입각하여 ‘동(東)’을 초극(超克)하고 서(西)로 진출하여 ‘아시아’를 아우르며 팽창해 결국 서양과 충돌한다. 이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는 약 반세기 동안 지속된 일본산 근대적 ‘동아시아’를 해체시킨다.

일본은 패전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을 경제 도약의 기화(奇貨)로 또 냉전과 미국의 ‘핵우산’을 보금자리로 삼아 초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경제와 군사 부흥을 각각 제1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새롭게 탄생한 中國은 문화혁명 등 수 차례의 내부 시행착오 끝에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견제할 정도로 급부상하였다. 타이완 역시 한국과 유사한 패전의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각개 약진이 한창 피크를 이루던 때인 1990년을 전후하여 마침 냉전체제가 붕괴하자,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인’들에 의한 ‘동아시아’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 동안 냉전체제 아래에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탈냉전과 더불어 미국의 ‘음지’에서 서서히 벗어나 스스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양지’로 나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III

전전(戰前)의, 또 냉전시기의 ‘동아시아’가 아닌, 현시점에서의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사실 무수한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답론해 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 실체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만이 사실일 것이다. 동아시아를 ‘동북아’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이도 있고 또 엄격히 구별하여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의 공동체 구축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모순일 것이다.

그렇다고 선불리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는 또한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일시하고 또 동북아를 한중일 3국으로 규정할 경우, 결국 전통시대의 화이(華夷 huayi)질서 -- 중화주의·소중화(小中華)사상·일본형(型) 화이의식 -- 의 범주를 자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접국에 확대 변용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또 다른 하나의 화이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문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실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아마도 영화 속 좀비와도 같이 목숨 질긴 그 화이관(華夷觀)이라고 하는 괴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국(자민족)은 ‘華 hua’이고 나머지 국가(민족)들은 전부 ‘夷 yi’로 인식했던 종래의 화이의식이 이번에는 한중일 3국 전체의 한 덩어리로 확대되어 이들 국

가(민족)만이 ‘화’이며 그 밖의 아시아 및 여타 지역의 국가(민족)들은 죄다 ‘이’로 재설정되는 식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지양해야 할 점은 현재(또는 미래)의 ‘동아시아’를, 여타 지역과의 ‘구별’이 아닌 ‘차별’을 근거로 ‘화’로 설정해 놓고 기타 지역들을 새로운 버전의 ‘이’로 인식하려 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이 이를테면 ‘동남아시아’나 기타 ‘아시아’ 지역 혹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을 (무)의식적으로 ‘이’로 취급하려는 오리엔탈리즘적 역사인식의 오류는 적어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어 있다. 미래의 역사를 짚어질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한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교과목 집필자들과 담당 선생님들 모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 논문은 다음의 e-journal을 한글로 번역/수정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ast Asia’ and Its History,” *The Review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 No.2. (2010)

[키워드]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조공책봉체제, 화이질서, 조규체제, 오리엔탈리즘

KOREA JOONGANG DAILY

2016년 09월 01일 목요일 009면 opinion

CARTOON from JoongAng Ilbo



PARK YONG-SEOK

The Japanese government yesterday sent 1 billion yen (\$9.7 million) to a Korean foundation for former sex slaves during World War II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between Seoul and Tokyo. Surviving "comfort women" refuse to accept the money. Japan wants a comfort women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removed.

28

WHAT IS HISTORY?

The third point is that we can view the past, and achieve our understanding of the past, only through the eyes of the present. The historian is of his own age, and is bound to it by the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The very words which he uses—words like democracy, empire, war, revolution—have current connotations from which he cannot divorce them. Ancient historians have taken to using words like *polis* and *plebs* in the original, just in order to show that they have not fallen into this trap. This does not help them. They, too, live in the present, and cannot cheat themselves into the past by using unfamiliar or obsolete words, any more than they would become better Greek or Roman historians if they delivered their lectures in a *chlamys* or a *toga*. The names by which successive French historians have described the Parisian crowds which played so prominent a role in the French revolution—*les sans-culottes*, *le peuple*, *la canaille*, *les bras-armés*—are all, for those who know the rules of the game, manifestos of a political affiliation and of a particular interpretation. Yet the historian is obliged to choose: the use of language forbids him to be neutral. Nor is it a matter of words alone. Over the past hundred years the changed balance of power in Europe has reversed the attitude of British historians to Frederick the Great. The changed balance of power within the Christian churches betwee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has profoundly altered their attitude to such figures as Loyola, Luther, and Cromwell. It requires only a superficial knowledge of the

THE HISTORIAN AND HIS FACTS

29

work of French historians of the last forty years on the French revolution to recognize how deeply it has been affected by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The historian belongs not to the past but to the present. Professor Trevor-Roper tells us that the historian "ought to love the past."⁴ This is a dubious injunction. To love the past may easily be an expression of the nostalgic romanticism of old men and old societies, a symptom of loss of faith and interest in the present or future.* Cliché for cliché, I should prefer the one about freeing oneself from "the dead hand of the past." The function of the historian is neither to love the past nor to emancipate himself from the past, but to master and understand it a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181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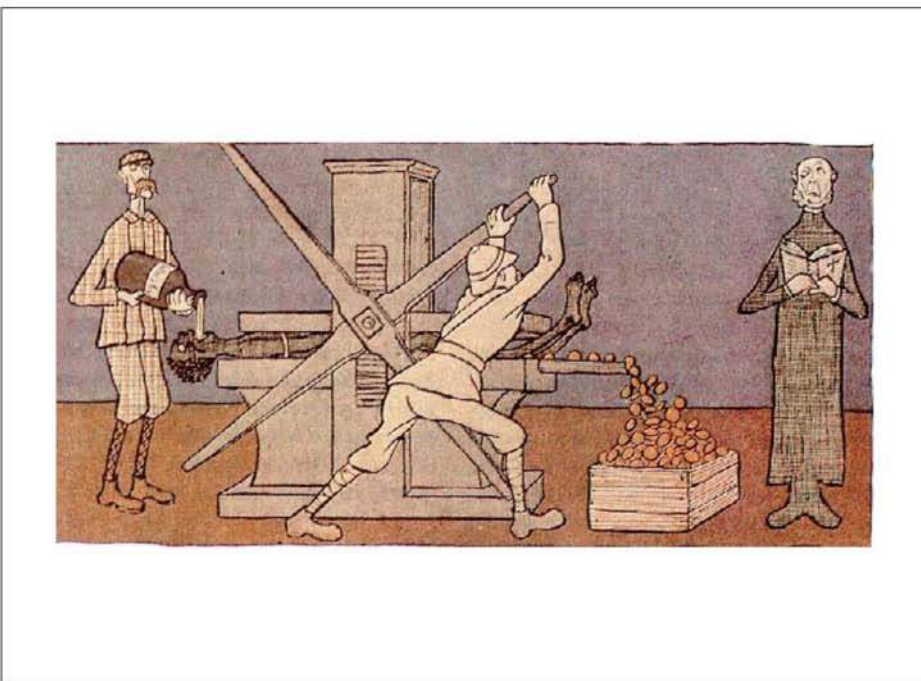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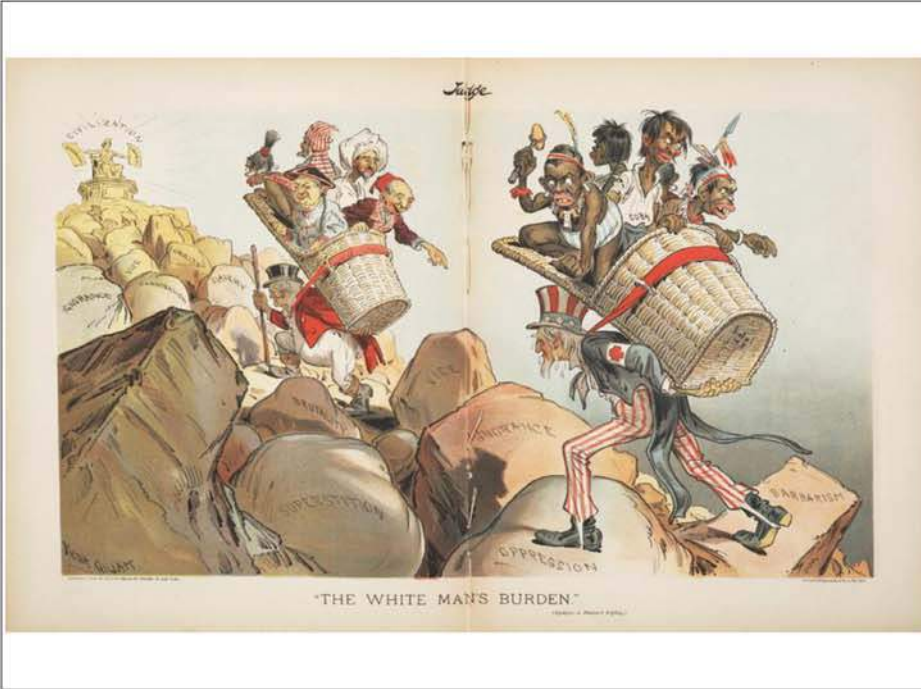
If, however, these are some of the insights of what I may call the Collingwood view of history, it is time to consider some of the dangers. The emphasis on the role of the historian in the making of history tends, if pressed to its logical conclusion, to rule out any objective history at all: history is what the historian makes. Collingwood seems indeed, at one moment, in

⁴ Introduction to Burckhardt: *Judgments on History and Historians*, p. 17.

* Compare Nietzsche's view of history: "To old age belongs the old man's business of looking back and casting up his accounts, of seeking consolation in the memories of the past, in historical culture" (*Thoughts Out of Season* [London: Macmillan & Co., 1909], II, pp. 65-6).

Apol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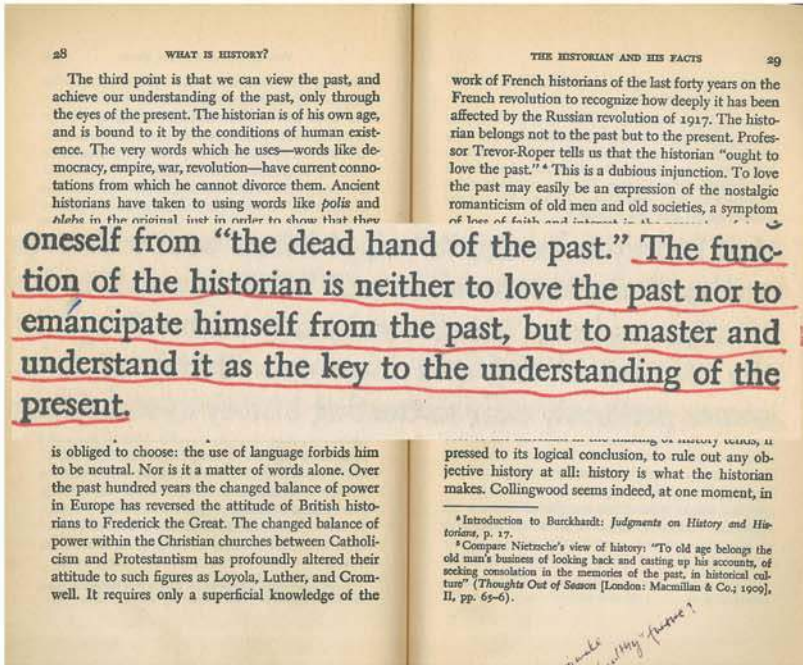
THE COLOVA CRIB | 315

was made to replace the world maps either looted or destroyed. Japanese pirates also caused continual problems for Korean coastal communities. But from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until the late nineteenth, Japan and Korea had relatively amicable relations. All this was to change with the decline of the Joseon regime and the rise of a more militaristic and expansionist Japan.

In the Meiji period (1868–1912), Japan followed a policy of economic modernization and military buildup. The humiliation of the 1854 Treaty of Kanagawa, which

In the Meiji period (1868–1912) Japan followed a policy of economic modernization and military buildup. The humiliation of the 1854 Treaty of Kanagawa, which forcibly opened up Japan with the power of Perry’s gunships, revealed the costs of seclusion, economic backwardness, and lack of military might. In its wake, Japan hired thousands of foreign experts and quickly adopted modern technology as it sought to modernize, industrialize, increase its military strength, and improve its global position. It also embarked on mapping nearby states.

general background was the decline of the Qing empire, the increasing weaknes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growing strength of Japan. The specific context was growing conflict and rising tension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control of Korea. In 1882, in the wake of droughts, famine, and a fiscal crisis, riots in Seoul led to attacks on the Japanese legation. Japan sent warships and troops to Seoul, and China countered with 4,500 troops. A treaty signed in 1885 reduced the immediate conflict, but the underlying tensions did not disappear. In 1894 a pro-Japanese coup was succeeded by a pro-Chinese coup, and tensions again increased between Japan and China, with yet another treaty signed in 1895. But the antagonism continued. In 1894 a peasant rebellion led the Joseon to ask for Chinese troops—almost 2,000 were sent. The Japanese countered with 8,000 troops, who captured Seoul in June 1894, established a pro-Japanese faction, and declared Korea independent from Chinese control. War between China and Japan was officially declared on August 1, 1894. The Japanese army defeated Chinese troops defending Pyongyang, and the Japanese navy destroyed Chinese warships at the mouth of the Yalu River.



Korea explains matters to Japan.



문제1	다음 중 조공(책봉)체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 이전시기에 한국이 중국에게 공물을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것이 조공이다. 2. 중국은 책봉을 통해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했다. 3. 조공책봉체제 하의 조선은 중국의 속국(=식민지)이었다. 4. 조공책봉체제는 전통시대의 중국과 한국이 서로 필요로 했던 국제질서체제였다.
정답	
해설	조공책봉은 근대 서구적 개념인 ()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으며, () 관계에 입각했던 일종의 '()'인 동시에 공사(公私)의 ()였다.
문제2	동아시아 '근대'에 대한 해석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시아 3국의 '근대'는 서구열강에 의한 '개항'에 의해 비롯되었다. 2. 서구의 만국공법(국제법)이 동아시아의 기존 법이나 도덕적 질서보다 더 '합리적'이어서 후자가 자연 붕괴되어 비로소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가 시작되었다. 3. 동아시아 3국은 서세동침에 의한 서구의 도전에 제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역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동아시아 3국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들의 법체계와 학문 전반을 전부 수용하게 되었다.
정답	
해설	조약체제 도입과 함께 곧바로 전통질서가 ()됐던 것은 아니며, 그 전통질서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갈등의 결과 ()된 것이다. 일본이 '근대화' 즉 서구화에 ()했지만,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의한 대륙 침략 전쟁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근대 역사는 ()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